

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진단

2022.3.30

조돈문(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, 노회찬재단 이사장)

1. 2022년 대선: 불평등 심화 시대 노동 없는 대선

○ 2022년 대선의 세 가지 특징:

- * 불평등 심화 시대의 대선: 노동없는 대선 ⇒ 반(反)노동 후보 당선.
- * 역대급 비호감 대선: 저열한 혐오의 정치 전략 ⇒ 정권의 취약한 정당성.
- * 최악체 여소야대 정부 탄생: 노동법 개악보다 생산현장 갈등 증폭 예상.
 - 높은 정권교체 여론에도 0.73% 24만 7077표차 초박빙 당선.
 - 국민의힘·국민의당 113석(37.7%) ⇔ 민주당·정의당 178석(172+6: 59.3%)

2. 윤석열 정부의 사회·경제정책

○ 본격적 이윤주도성장 전략:

* 혁신성장 전략으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: 이명박근혜 정권의 재벌그룹 대기업 수출중심 이윤주도성장 전략의 복원.

*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보장하는 경제성장 정책 중심 ⇒ 노동·사회정책은 주변화 됨.

* 노동정책의 평가 기준: 노동문제 해결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될 것 ⇒ 노동정책은 경제성장전략의 함수가 됨 ⇒ 자본이 요구하는 일방적 유연화가 추구될 것.

윤석열-이재명 후보 정책역량 평가 여론(%). [자료: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, 2022.2-3월]

정책영역(13)	이재명	윤석열	이재명-윤석열 격차
<이재명 우위(6)>			
경제	43	27	16
코로나19 상황	33	20	13
기후변화환경	28	17	11
사회복지	31	22	9
외교	39	30	9
과학기술육성	19	14	5
<이재명-윤석열 동율(6)>			
갈등해소 국민화합	32	30	2
러시아·우크라이나사태 대응	36	34	2
남북관계	36	35	1
공직자 인사	34	33	1
부동산	32	33	-1
국가안보	38	39	-1
<윤석열 우위(1)>			
공정사회 실현	29	35	-6
<전체>(13)			
평균*	33.1	28.4	4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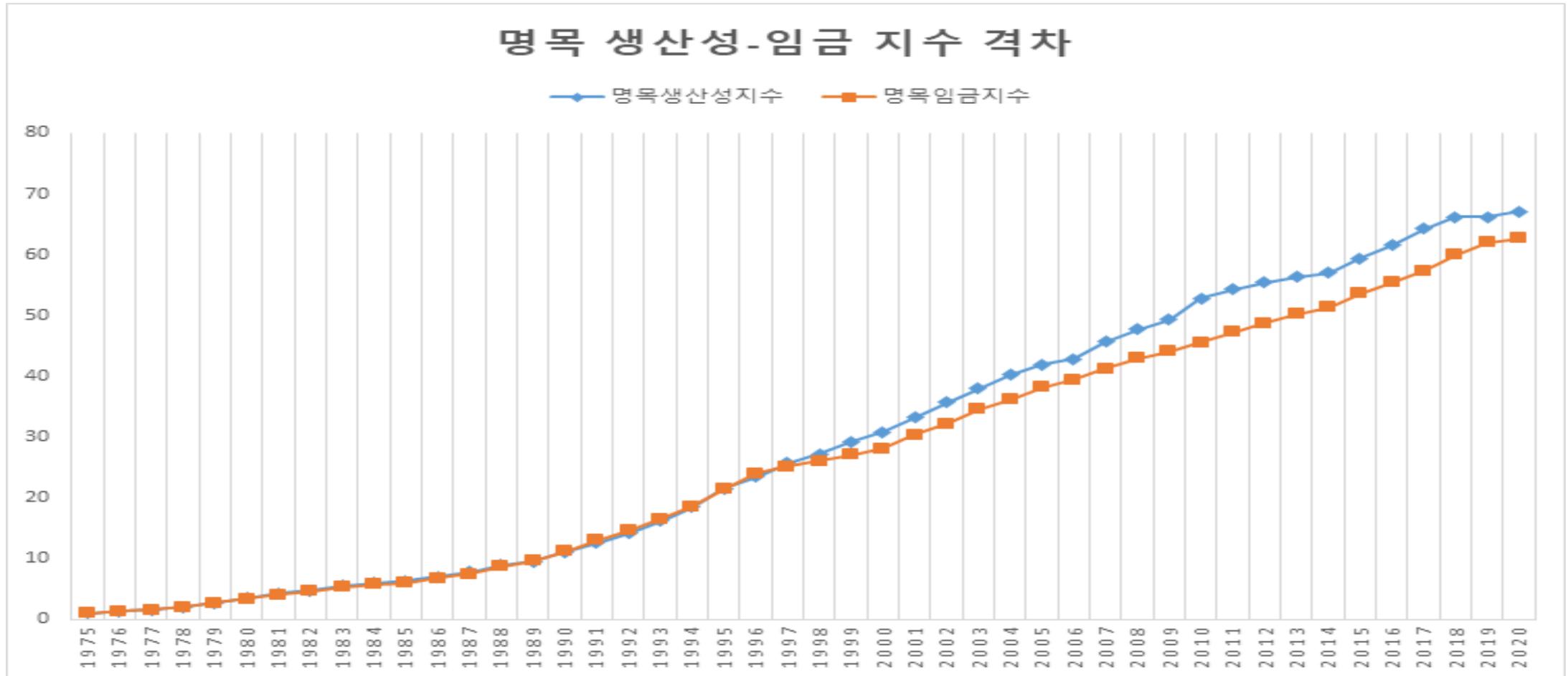
윤석열의 '공정성'(?): 공정성 3유형과 유력 대선 후보의 입장 비교

	평등 위한 공정성	기계적 평등의 공정성*	기득권세력의 공정성
<소득계층>			
상층 소득	↓	⇒	↑
중층 소득	⇒	⇒	⇒
하층 소득	↑	⇒	↓
<정책대안>			
정책 내용	누진소득세, 부유세, 최고임금제	기본소득	시장개입 최소화, 탈규제, 세제 완화
정책 효과	불평등 완화	불평등 유지	불평등 악화
20대 대선*	정의당 심상정	민주당 이재명	국민의힘 윤석열
안철수 입장*	equity 긍정 평가	equality 비판	inequality 최종 정치적 선택

* 2022년 3월 2일 대선후보 사회분야 토론회의 안철수 후보 발언을 참조함.

○ 윤석열 후보의 '기득권세력의 공정성' 가치에 기초한 이윤주도성장 전략: 불평등 심화(노동생산성-임금 격차 확대) 추세를 더욱 보강할 것임.

<그림 2.1> 한국의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지수 격차, 1975-2020(1975년=1)



자료: 한국은행 국민계정

3.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: 공약과 전망

- 3.1. 비정규직 규모와 사용 규제 영역: 비정규직 오·남용 방지
- 3.2. 취약집단 노동자 차별처우 영역: 차별처우 방지
- 3.3. 노동조건 영역: 임금,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양극화
- 3.4.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: 노동3권 억압, 노동조합 영향력 억제
- 3.5. 여성돌봄노동 보호 및 사회안전망 영역: 최소한의 보호

○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 자료집(국민의힘 2022):

* “노동개혁” 부분: 노동시간 유연화, 상생의 노사관계, 임금체계 개선에 한정되어 있음.

* 윤 후보 측의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결여를 보여줌.

3.1. 비정규직 규모와 사용 규제 영역: 비정규직 오·남용 방지

	개선	방치·중립	개악	결과 전망
비정규직 사용 규제 기본 원칙	생명안전 관련 업무 직고 정규직 채용*	상시적업무 직고 정규직 채용 원칙 유보**		비정규직 오·남용 방지/ 비정규직 규모 감축 어려움
간접고용 규제	도급-파견 구분 법 제화***	불법파견 고용의제 반대/ 단체협약 효력확장 반대/ 공공부문 자회사 직고전환 반대		간접고용 오·남용 방지

*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반대, 산재 개인 과실 강조하여, 생명안전 존중 공약 진정성 의심됨.

** 상시적 업무 "기간의 정함이 없는" 고용계약 체결 원칙 동의: 직접고용을 전제하지 않음.

*** "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"을 높이는 방안으로 찬성: 간접고용 오·남용 억제 의도 아님.

3.2. 취약집단 노동자 차별처우 영역: 차별처우 방지

	개선	방치·중립	개악	결과 전망
임금격차		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반대*		임금격차 확대 방지
5인미만 사업장		근기법 적용 법개정 유보**		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방지
단체협약 효력 확장		단협 효력확장 반대		차별처우 방지

* 반대 사유: 직무급-성과급 결합 임금체계를 수립하는 데 지장 초래.

** 유보 사유: "소상공인, 자영업의 인력운영 부담이 급증하게 될 경우 해당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" 우려.

3.3. 노동조건 영역: 임금,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양극화

	개선	방치·중립	개악	결과 전망
임금체계			최저임금제 차별적용*/ 직무·성과급 임금체계	임금수준 양극화
노동시간제			선택적 근로시간제 단 위기간 확대**	주52시간 상한제 무력화/ 장시간 노동 방치/ 노동시간 양극화
산업재해		실효성 없는 예방 위주 정책/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반대***		사용자 책임 회피/ 산업재해 방치

*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: 최저임금제를 비현실적 제도로 규정하고 폐지하겠다는 입장 강조했음, 반복하기도 함.

** "주 120시간을 바짝 일하고 이후 쉴 수 있어야 한다" "비현실적인 주 52시간 상한제" 철폐 공언함.

*** "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"시키는 법으로 규정함; 산재사고 노동자 개인의 과실 측면 강조함.

3.4.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: 노동3권 억압, 노동조합 영향력 억제

	개선	방치·중립	개악	결과 전망
노동기본권 사각지대		노동조합법 근로자 개념 확대 반대/ 기본인권 보호 기본법 제정*		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방치
초기업수준 단체교섭		초기업 교섭 확대 및 원·하청 공동교섭 의무화 반대/ 원·하청 공동노사협의회 실시		고용안정성·노동조건 양극화 방치
상생 노사관계		노사협의회 중심 상생 노사관계**		노조 영향력 억제

* "건강권, 인권, 모성보호, 갑질예방 등 기본적 인권부분" 만 보호.

**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: 과반수 조직 노동조합 위촉 방식을 직접투표 방식으로 전환함.

3.5. 여성돌봄노동 보호 및 사회안전망 영역: 최소한의 보호

	개선	방치·중립	개악	결과 전망
사회안전망	근로장려세제 확충*/ 상병수당제 도입	전국민고용보험제 지속*		사회안전망 강화
여성·돌봄노동 보호	육아휴직기간 확대/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**			여성·돌봄노동 보호 효과 ***

* 고용보험제 의무가입 대상 미가입 임금노동자 즉각 가입; 소득보전을 제고 없음;

-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위한 별도의 사회안전망 도입 필요성: 모든 일하는 사람의 명실상부한 소득 기반 전국민고용보험제 실현 입장 아님.

- 고용보험제 강화 없는 근로장려세제 확충 공약의 의미(?)

** 대선공약 자료집에 "여성" "여성노동자" 부분 없고, "엄마아빠" 부분에서 다룸.

*** 여성가족부 폐지, 성인지예산 감축 국방비 증액,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한 후보: 여성·돌봄노동 보호 공약의 진정성(?).

4. 윤석열 정부의 선택과 노동정책의 정치

○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: 대선공약에 기초한 전망.

* 대체로 핵심 과제들을 방치하여 노동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킬 것: 비정규직 규모, 차별처우,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3권 영역 등.

* 개선 공약한 부분: 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여성돌봄노동 보호 영역임.

* 개악 공약한 부분: 임금체계와 노동시간제 영역 등 ⇒ 임금수준 격차와 장시간 노동문제 지속됨, 임금수준과 노동시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.

4.2. 윤석열 후보 노동공약 침묵의 의미

○ 대선공약집의 빈약한 노동정책 영역: 윤 후보는 노동문제 해결 정책방향에 원론적 수준에서 동의 표명하지만,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의제화된 정책수단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음.

- (1) 비정규직 규모 감축 위한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: 직접고용 원칙 동의 ⇔ 법제화 반대.
- (2) 차별처우 해소 위한 동등처우 원칙: 동일 노동 동일 보상 원칙 주장 ⇔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 법제화 반대.
- (3)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: “모든 노동자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” ⇔ 노동조합법 근로자 개념 확대 반대.

4.3. 윤 당선자의 자본편향 관점과 민주노총 죽이기

1) 윤 당선자 정책: 사용자 저항 없는 정책,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

○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,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,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개념정의 확대,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핵심 정책 대안들 반대함.

* 노동친화적 정책 대안: 사용자 저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가능성 이유로 반대함 ⇔ 친자본 반노동 정책 대안: 노동자 저항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도발하는 정책도 강행 의지 천명함: 주52시간 상한제 무력화, 최저임금 차등적용, 성과급제 임금체계 수립 등.

* 노동정책의 경험적 준거: 이윤주도성장 전략과 "기업하기 좋은 환경"의 전형인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모델.

2) 윤 당선자 의도: 노동조합 영향력 억압, 민주노총 죽이기

○ 상생의 노사관계에서 노동측 주체: 노동조합보다 노사협의회와 미조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제를 설정함. 노동조합의 영향력 강화를 경계함.

○ 한국노총의 역할: 조직노동의 대표자, 윤 정부의 정책 하위 파트너.

* "상생의 노사관계 형성과 사회적 대타협" 주도해주길 요청함.

○ 민주노총=강성노조: 최저시급제, 주 52시간 제 등 비현실적 제도들로 중소기업 어렵게 하고 기업 해외이전하게 함.

*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의 최대 걸림돌로 규정함.

* 민주노총 강성노조의 불법행위 엄정 대처 공언함: "무단사업장 점거, 폭력행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으로 공정한 노사관계 관행 확립"을 공약함 ⇒ 공권력 활용 의지를 분명히 했음.

4.4.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퇴행 우려

- 윤 당선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, 최저임금제 차별적용 등 친자본적 노동개혁을 공약해 왔음.
- 윤석열 정부는 제한적으로 공약한 친노동 정책공약들도 자발적으로 공약 실현을 주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.
- * 이윤주도성장전략: 노동정책은 이윤주도성장 전략의 정책 수단이 됨.
- * 정부는 노동시장 개입 최소화 & 노사관계는 노사 당사자의 자율: 자본의 이해관계를 훼손하고 자본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친노동 (개입) 정책은 시도하지 않을 것.
- * 대기업 중심 혁신성장전략: 중소기업 이윤율 상승 어려움 ⇒ 중소기업-노동자 갈등 구도 형성해서 친노동정책 공약 폐기 알리바이 확보할 것.
- * 육아휴직기간 확대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등 여성·돌봄노동 보호 정책 추진 신뢰 어려움: 젠더갈라치기 선거전략, 성인지예산 감축 국방비 증액, 성범죄 무고죄 처벌강화 공약.
- * 인수위원회 인적 구성: 박근혜정부 노동정책 적폐 주체의 복귀 우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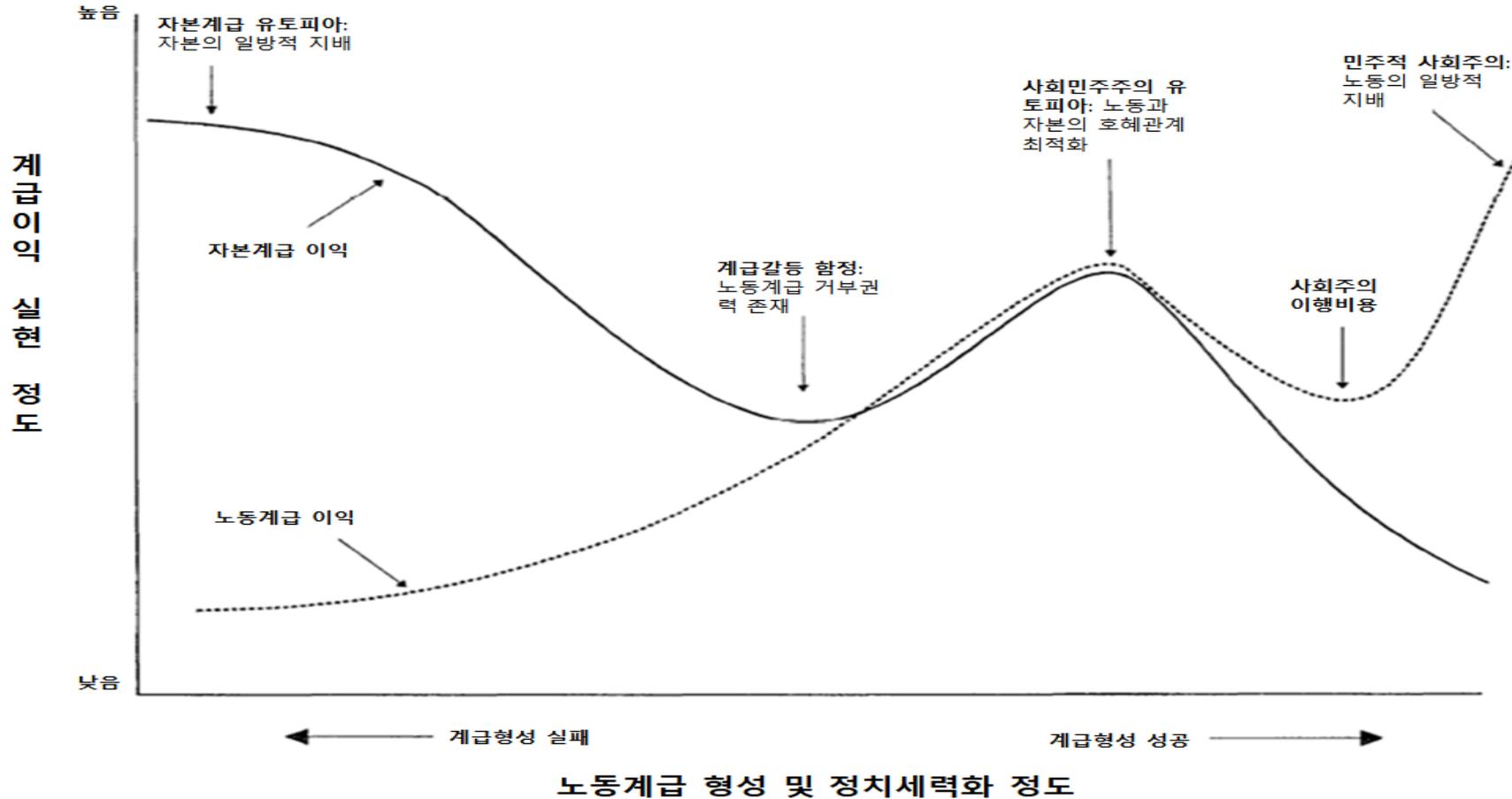
4.5. 노동정책의 정치와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(?)

- 노동친화적 노동개혁 위한 변화의 동력: 민주노총 죽이기 나선 윤석열 정부에 기대 어려움.
- * 이재명 민주당과 심상정 정의당을 활용할 필요성: 60%에 달하는 국회 의석점유율.
- *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지만,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행 의지와 자본·기득권세력 저항 돌파력 기대 가능함.
- * 이 후보의 비정규노동단체 정책협약: 핵심적 노동정책 대안들 포함되어 있음(상시적 업무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 법제화,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, 노동조합법 근로자 개념 확대 등).
- * 이 후보의 경기도 지사 재임기간 노동정책 이력: 경기도 소속 파견·용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;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정성 보상 수당 지급; 플랫폼 음식배달 주문 공공앱 개발, 플랫폼 노동단체들과 표준계약서 도입 등 사회협약 체결;

4.6. 노동정책의 정치와 민주노동운동의 전략

- 민주당·정의당의 노동친화적 노동개혁 위해 민주노동운동의 추진 압박 필요함: 민주노총의 유의미한 전략적 개입 요구됨(전체 노동계급을 대표하여 노동정책의 정치를 주도할 전략 & 역량 요구됨).
- 민주노총을 불법행위나 일삼는 강성노조로 폄훼하며 탄압을 약속하는 것이 득표전략이 되는 현실: 민주노총 포함 민주노동운동의 냉철한 현실 분석과 자기성찰이 요구됨.
- * 민주노총 폄훼해도 노동계급의 계급투표 & 시민의 분노 흔적 없음 ⇔ 젠더갈라치기 이대남 전략에 대한 분노: 20대 여성은 젠더투표로 응징했음.
 - 노동계급 계급형성 실패, 민주노동운동의 대중 소통·공감 능력 부족.
- 노동친화적 노동정책의 성공 위해 시민들의 공감·동의를 필요 조건: 민주노동운동은 도덕적 리더십(계급헤게모니)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;
 - * 대중과 소통하며 대중의 동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, 민주노동운동도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함: 세상은 칼라, 대중도 칼라렌즈 ⇔ 운동은 흑백렌즈만 고집하면 자폐증(?)
 - * 반면교사: 자기성찰 없이 극우언론 탓, 남 탓만 하는 "대깨X 민주당"의 패배.

<그림 4.1> 노동계급 계급형성과 노동계급·자본계급 이해관계



○ 자본 & 윤 정부: 자본의 일방적 지배 가능하다고 판단함: 현재 계급갈등함정 (네거티브섬) 좌측 어느 지점(제로섬 게임).

* 민주노총 죽이기 ⇒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& 거부권력 ↓ ⇒ 주52시간제, 최저임금제 무력화 ⇒ 자본계급 이익 ↑

감사합니다